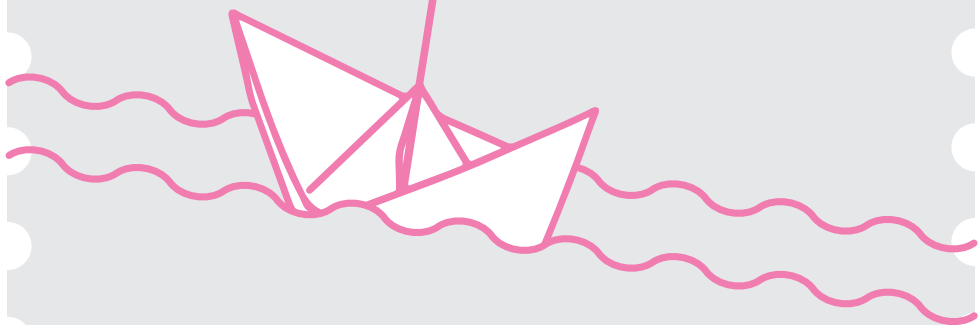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제도
대한민국 빈곤의
정신
탈출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빈곤탈출
안내서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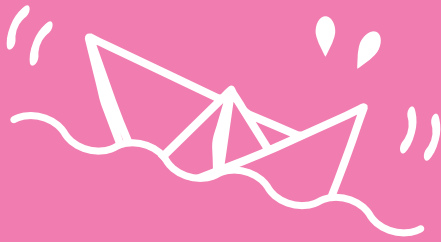
기본편 **우리가 빈곤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 가능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 무엇인가요?
수급자가 되려면?

분석편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 찾기**
광범위한 사각지대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빈곤의 덫, 부양의무자 기준
너무 잔인한 수급자 선정과정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응용편 **박근혜 정부 맞춤형 개별급여의 불편한 진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는 무엇인가요?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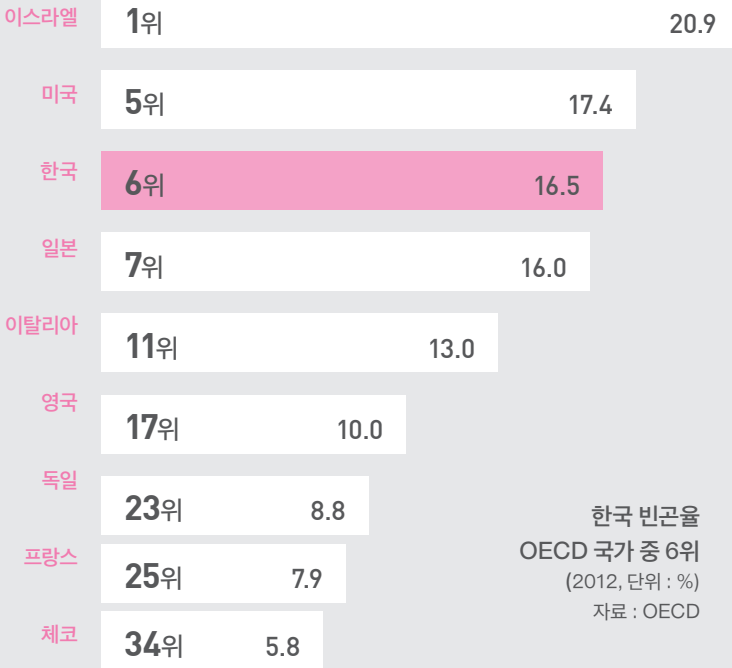
모범답안 **민생보위가 제안하는 해법**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의 삭제

직장을 잃었어요
수급에서 탈락했어요
병에 걸려서 일 할 수 없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빈곤은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지 않나요?
'맞춤형 개별급여'는 좋은 것 아닌가요?
부정수급자를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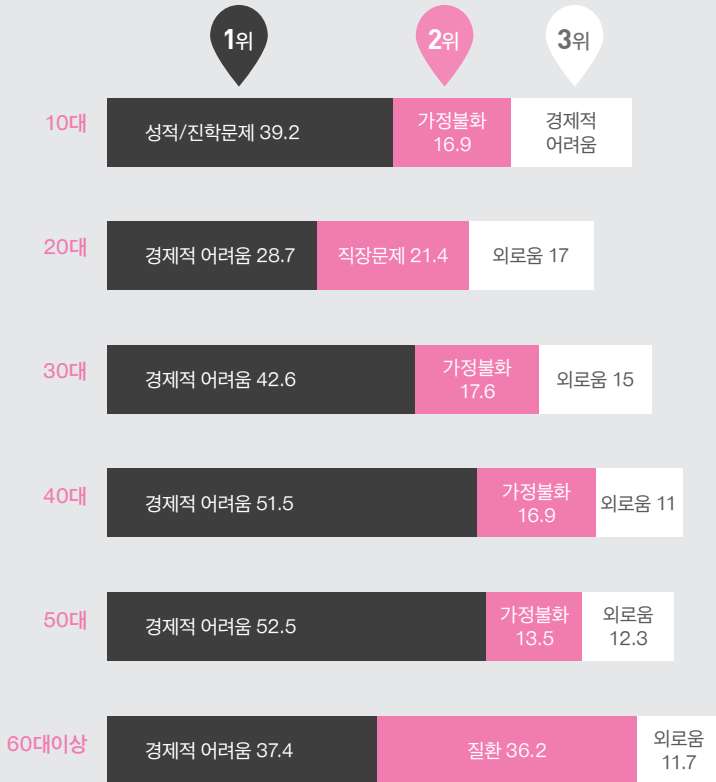


벗어나기 어려운 빈곤현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하)은 2012년 16.5%로
OECD평균 인 11.3%에 크게 웃돌며 34개 국가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죽음의 그림자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4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들 중 20%에 이르는 이들은 생활고로 인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2012년 현재 20대 이상 모든 연령의 자살충동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살충동 원인 (2012,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가 책임지는 기초생활, 가능한가요?

EU
25.2%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평균 비교 (2012)

출처 OECD,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2012)

OECD
21.8%

한국
9.3%

국민을 위한 공공복지지출, OECD 국가 중 꼴지수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00조에 달하고,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OECD국가 중 26위에 그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의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2년 OECD 32개국은 공공사회복지 지출로 GDP의 평균 21.8%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GDP대비 9.3%에 불과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특히, 여성, 아동, 노인의 빈곤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이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그에 맞는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가들이 충분한 공공복지지출을 통해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안, 우리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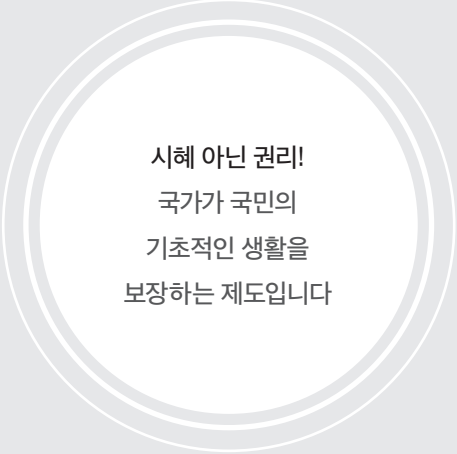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공공부조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국민소득이 적은 나라들도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공공 복지 지출로 빈곤율이 낮은 것을 보면, 국민의 빈곤문제는 사회정책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통해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튼튼한 사회안전망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빈곤은 더 이상 누구의 나태나 게으름에 의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개인의 노력으로만 빈곤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회구조적 산물입니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사회문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무엇인가요?



시혜 아닌 권리!
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간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정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저생계비를 권리로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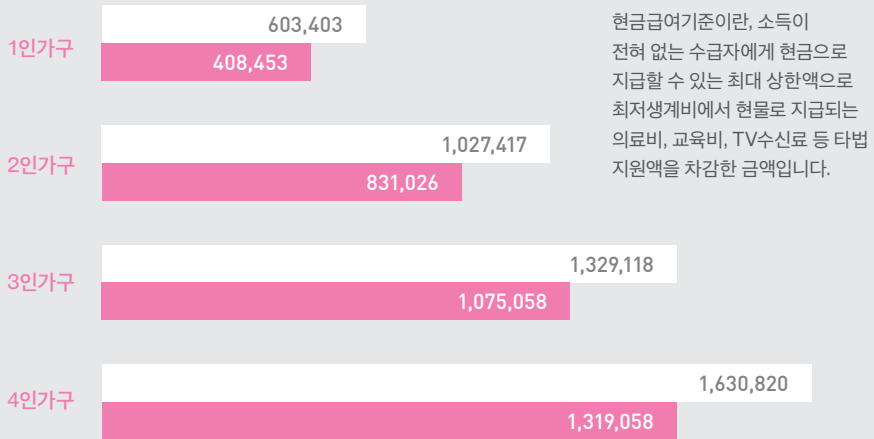
금액을 말함)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급여를 받는 대상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그 차이만큼 현금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었고, 생계/자활/교육/의료/해산/장제/주거 급여로 총 7가지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 무엇인가요?

2014년 최저생계비 (단위 : 원)

■ 최저생계비
■ 현금급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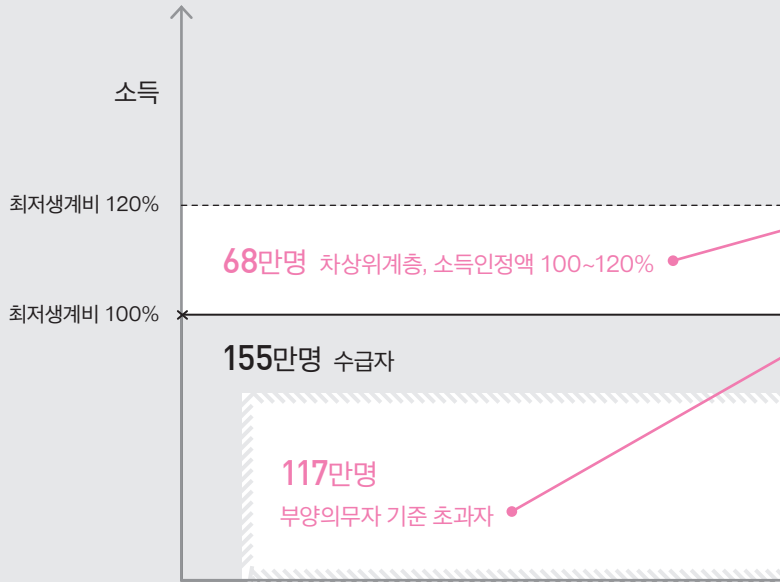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최저생계비는 법적으로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법 제2조 5항)’을 의미하며 최저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는 지출액수로 나타나며 거기에 기간이 표시됩니다. 그래서 한 달 최저생계비, 하루 최저생계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달 최저생계비가 사용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

그래서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된다면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 말고도 긴급복지지원, 장애연금(수당), 보육료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최저생계비입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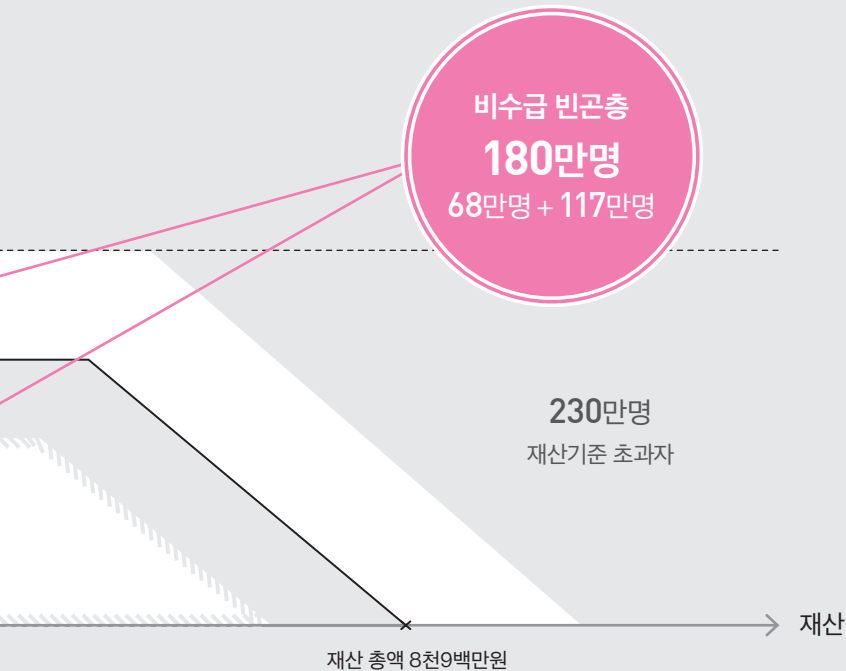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또는 친척 및 기타 관계자는 해당 가구의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동주민센터나 시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직권으로 위험에 처한 주민의 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 1,2항)

그러니까 신청을 하셔야만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가까운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문의하세요.

소득·재산조사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수급 당사자) 및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을 조사하여 급여 지급 여부와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급여를 신청할 때, 당사자와 부양의무자가 소득·재산 정보를 국가에 제공한다는 동의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에 서명을 하셔야만 합니다. (법 제2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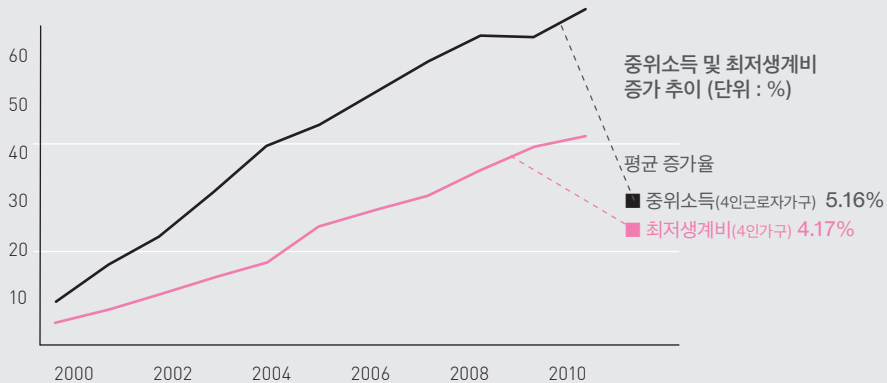
광범위한 빈곤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 가난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

정부는 이미 법이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예산부담을 이유로 실제 빈곤에 처해있지만 보호하지 못하는 거대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과도하게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는 180만 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경우에 해당하는 68만명의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부양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어도 이를 수급권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빈곤층이 117만명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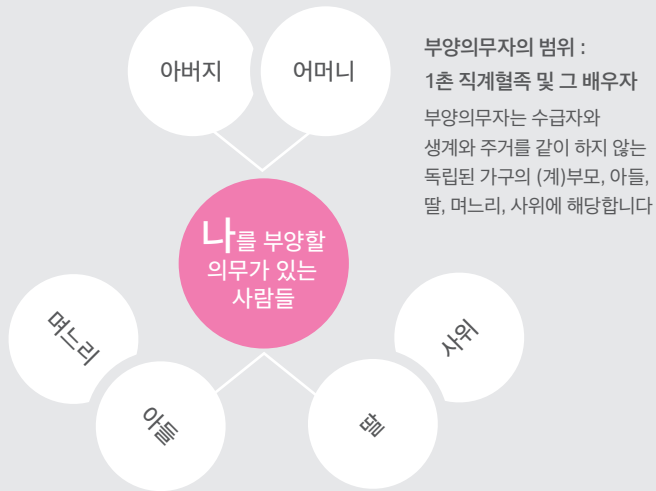
수급자의 보장수준은 적절한가요?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3천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용돈이나 생활비와 최저생계비를 같은 개념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그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추정 소득 등을 뺀 차액의 수준을 유지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현금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8만 8천원입니다. 이 중 월세, 교통비, 통신비 등을 제하면 실제 생활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민생보위의 수급

자 가구 가계부 조사에 따르면 수급자이지만 생활비가 없어 무료급식을 전전하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가구가 한 여름에도 과일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는 등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역 차, 가족유형의 다양화(장애가구,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1인가구 등)를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보장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증가폭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제도를 도입한 후 상대적 소득 증가율과 격차를 벌려왔습니다.

빈곤의 덫, 부양의무자 기준



사각지대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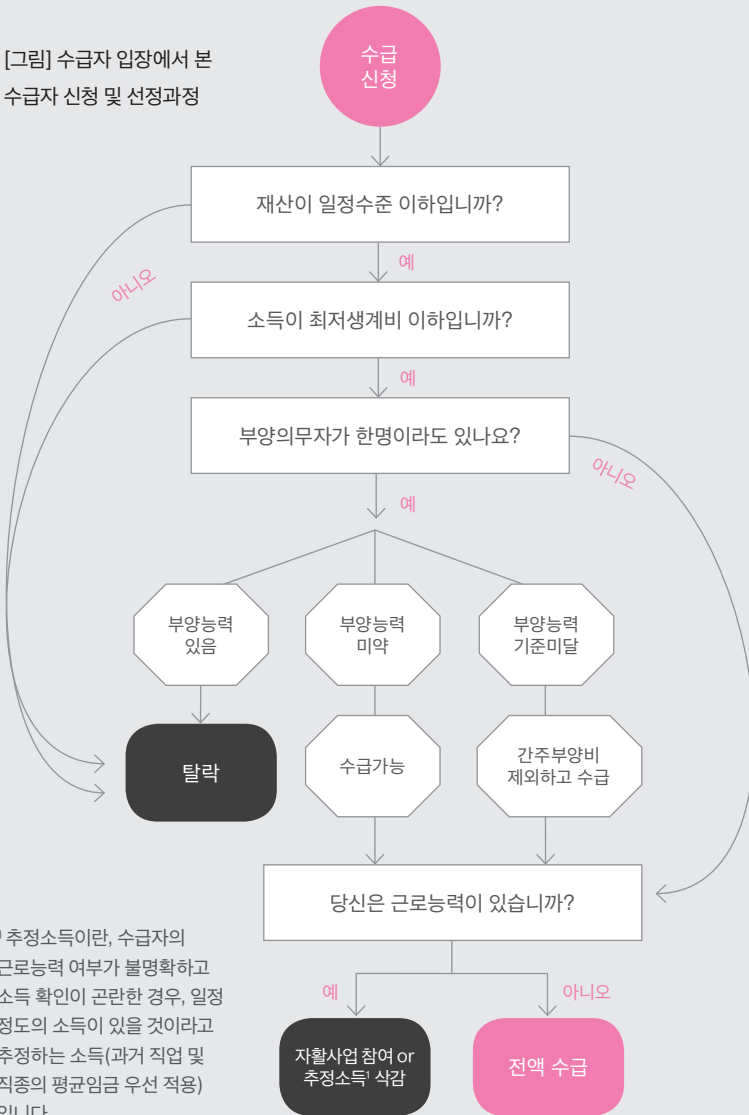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줄을 잇는가 하면, 자립 생활을 꾸리고 싶어 하는 장애인이 노인이 된 부모에게 부양을 의탁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갓 20살이 된 청년도 가난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가난한 가족들에게 가난의 책임을 국가가 떠넘기는 것

2011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1만 9978명입니다. 이들 부양의무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233만원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345만 원의 6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기준을 적용하여 부양의무자 마저 빈곤에 빠져야만 겨우 부양의무를 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자녀나 부모에게 부양부담을 지울 수 없어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빈곤에 방치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너무 잔인한 수급자 선정과정

[그림] 수급자 입장에서 본
수급자 신청 및 선정과정



수급자 선정과정, 안 주고, 덜 주기 위한 것?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수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먼저 부양의무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소득을 부과 받거나 자활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재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거나, 근로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는 '최저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법 취지와는 상반되는 일이지만 예산을 핑계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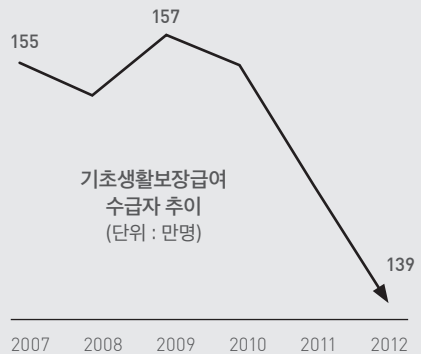
정부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인간관계, 건강상태 등의 정보를 통해 국민을 빈곤문제로부터 종합적으로 관리와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정보들이 급여를 깎고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수급자인 지역주민을 보호할 공공인력이 역부족하여 생기는 운영상의 한계가 심각합니다.

부정수급자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정부는 부정수급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7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설치한 '복지부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정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부정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복지부정 신고센터'는 100일간 100억의 복지부정을 발견했다고 했지만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수급은 7천만원에 불과했고, 요양병원 시설

장 등 제공기관의 비리는 97억 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지부정' 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들만 악독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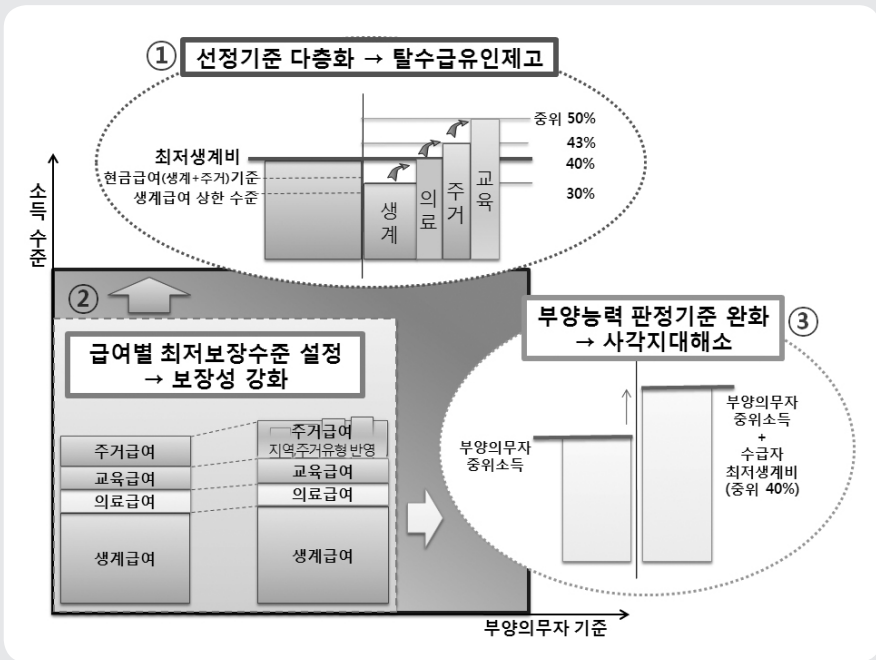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인구의 3%도 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사각지대 규모와 빈곤층은 인구의 8%를 넘습니다. 부정수급자를 잡는데 쓸 여력과 재정으로 더 많은 빈곤층을 지원해야 빈곤문제는 해결됩니다.



빈곤을 증가하는데, 수급자는 줄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을 하고 있고, 부양의무자 기준과 적절하지 못한 최저생계비 기준, 비현실적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180만명의 국민이 빈곤에 처해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말 157만명이었던 수급자수가 최근 13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변화는 수급자가 빈곤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수급자에서 탈락한 국민이 늘어난 결과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개별급여'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향

현 정부는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탈빈곤)을 돕고,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중위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다양화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으로 새로 발굴되는 수급자 숫자는 불과 12만명입니다. 117만명의 사람들이 부양의무

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너무 적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을 다양화' 한다는 명목으로 최저생계비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수준을 명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해체한다면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희석시키고,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을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송파의 세 모녀가 월세와 공과금 70만원이 든 봉투를 남긴 채 자살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 송파 세 모녀에 대해 박근혜대통령은 '수급신청을 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지만 이들은 신청을 했어도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모녀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의하면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추정소득'을 부과했을 것입니다. 설령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더라도 수급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뀌는 개편안에도 '추정소득'은 있고, 선정기준을 다양화 한다지만 여전히 기준이 너무 낮아 해당하는 급여가 없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 통과시키려는 정부

정부는 기초법을 바꿔야한다고 말 하면서 아직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의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해놓았을 뿐인데 박근혜대통령은 이를 '정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기초법 개정안은 기초법을 더 나쁘게 만들고 해체시킬 개악안입니다.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야
하나요

해법1.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국민에게 헌법적 가치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수준을 구체적 수치로 공표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서비스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최저생계비는 증가율이 일반 국민의 소득증가율을 따라지고 못하고 점점 벌어져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일반 국민 평균 소득의 32%에 불과합니다.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초기 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40%였지만 2009년엔 30%로 하락, 현재도 32% 수준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최저생계비가 하락하는 것은 1)수급자 가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2)선정기준자체를 하락시켜 수급자로 포괄해야 하는 빈곤층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나 예산에 좌우되지 않고 최저생계비의 사회적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적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위소득 00%이상으로 최저생계비를 정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해법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부양능력판정 소득기준 완화)는 비수급 빈곤층의 13%만을 신규 수급자로 편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가 추구하는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는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70세가 넘는 노부모에게 40세가 넘는 중증 장애인 자녀의 부양의무를 지우고, 이제 갓 20살 된 청년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국 국가의 정책이 세대간의 빈곤을 되풀이하는 사슬로 작용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족의 부양의무를 공공부조제도의 수급조건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선진국가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도 1990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자 선정요건에서 제외했습니다. 부양의무자를 공공부조 제도의 수급요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사적인 부양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현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빈곤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는 단지 예산 때문입니다. 예산을 핑계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방조하기 보다는 하루빨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단계를 현실적으로 세우는 것이 절실합니다.

해법3.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보건복지부가 정하던 재산을 소득환산액 기준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여 합리적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과 같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명문화하고 소득환산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해법4.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 삭제

실제 소득이나 실제 부양하는 비용이 아닌 추정을 통해 부과하는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는 정부의 통제 내에서 수급자를 탈락시키는 독소 조항입니다. 실질적인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이런 조항들은 삭제해야 합니다.

해법5. 수급자의 권리 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강제근로가 아닌 개인의 능력에 맞는 노동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생계급여 지급조건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과정에 수급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수급자의 알 권리와 이의신청권 보호 등 권리구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위치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중생활보장위원회(이하 민생보위)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초법 개악에 반대하며, 어떠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기초생활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 빈곤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는지 대안을 모색하고자 2013년 7월 5일 출범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당사자, 수급이 필요한 사람, 수급을 받아본 사람,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모두 함께 연대를 통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내용

2013/07/05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출범
2013/07/05	토론회 : 박근혜정부의 빈곤정책 평가
2013/07/24	워크숍 : “궁금해요, 기초법?”하루워크숍 진행
2013/08/01	기자회견 : 복지부의 현장조사 없는 수급권자 탁상조사 반대
2013/08/15	성명 : 2014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대한 규탄
2013/08/22	토론회 :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 결과 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2013/08/2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2013 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잔치 진행
2013/09/10	논평 : 박근혜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규탄
2013/11/29	기자회견 :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여의도 농성 돌입 선언
2013/12/17	논평 :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 연금 공약이행 촉구 결의대회 개최
2013/12/31	기자회견 : 기초법 개악, 장애인연금 공약 불이행, 복지예산 축소 규탄
2014/03/03	긴급좌담회 : 세모녀 사건으로 본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 마련
2014/03/06	기자회견 : 졸속 복지3법 추진 규탄 및 개악 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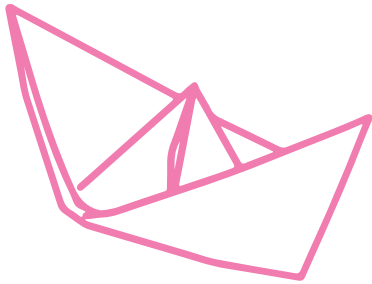
함께하는 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 공공운수노조연맹 / 공무원노동조합 /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동자동사랑방
/ 민주노총 / 민중의 힘 / 사회공공연구원 / 사회진보연대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부산반빈곤센터 / 보건의료단체연합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 성북주거복지센터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해방열사'단' /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실업단체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북평화주민주사랑방 / 정의당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 참여연대 / 통합진보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겨레두레연합회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한국진보연대 / 홀리스행동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종이배
빈곤과 절망을 끊는 희망의 종이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연대의 종이배
복지를 축소하려는 이들에게 보내는 경고의 종이배

분홍종이배는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고 싶은
우리의 외침입니다





기초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

첫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1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2013년부터 광화문역(5호선) 지하 농성장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분홍색 종이로 종이배를 접어 광화문으로 보내 주세요

가난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분홍 종이배 접기 운동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분홍 종이배는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표현합니다. 분홍
종이배를 접어 광화문 농성장이나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75번지 빈곤사회연대 (전화 02-778-4017)

셋째, 국민신문고와 국회에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을 남겨주세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대한민국 국회 www.assembly.go.kr 소통마당-국민제안 게시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health.na.go.kr 자유게시판

넷째,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